

장애예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예술인 수급권 실태분석 및
근로유인을 위한 정책 제안

2024. 4. 19. 금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 라운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실

장애예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CONTENTS

06	인사말	김예지 (국민의미래 국회의원)
08	인사말	김형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10	주제발표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39	지정토론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부장)
44		장진아 (하트하트A&C 대표)

장애예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장애예술인 수급권 실태분석 및 근로유인을 위한 정책 제언
일시	2024년 4월 19일(금) 오후 2시
장소	모두예술극장 라운지 (충정로 구세군빌딩 2F)
주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공동주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예지 의원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사회 : 방귀희 (장애인예술연구소장)

식전행사(공연)	드림위드앙상블
인사말	김예지 (국민의미래 국회의원)
인사말	김형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축사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개회	사회자
주제발표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지정토론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부장) 장진아 (하트하트A&C 대표)
현장토론	참석자 자유발표
폐회	사회자

인사말

김예지 (국민의미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미래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장애예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개최에 함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이사장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방귀희 장애인예술연구소장님, 그리고 발제를 담당해 주신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님과 토론자로 나서주신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책연구부장님, 장진아 하트하트 에이앤씨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 기반의 근로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을 위해 심도 있는 발제를 준비해 주신 이인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장애예술인 자립자금 마련’,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술지원인 양성 및 배치’, ‘장애예술인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지자체 및 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연계 강화’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 또한 장애예술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2021년 당시 206억 원이던 정부의 장애예술인 지원예산을 2024년 291억 원으로 40% 넘게 늘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모두예술극장의 개관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성과가 장애예술진흥의 부흥의 디딤돌이 되고, 새롭게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장애예술이 본격적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으고 행동한다면 장애예술인들이 본인의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이러한 창작 활동이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김형희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직무는
사회의 일원으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의 확산이다.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 여러분들께 따뜻한 사랑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장애예술인의 일 자리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 장애예술인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및 기업과의 채용 연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예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수급권자인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근로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장애예술인 수급권 실태분석과 근로유인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분들과 현장의 장애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장애예술인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빛내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의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앞으로도 장애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자립기반
을 마련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늘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모든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제발표

장애예술인 수급권 실태분석 및 근로유인을 위한 정책*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1. 기초생활수급권·차상위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및 근로 현황분석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한 장애예술인 고용 및 기초수급 현황

2020년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인구는 801천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고용율)은 29.5%로 2017년 36.9%로 비해 7.4%p 감소한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실업율은 5.8%로 2017년의 5.1%에 비해 0.7%p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인 경우 ‘지난 주에 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60.2%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19.3%),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를 응답한 경우는 정신장애(83.2%), 신장장애(80.4%), 뇌병변장애(77.5%) 등의 장애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박탈당할 것을 우려해서’ 응답은 0.7%, 지적장애도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인재 외, 「장애예술인 수급권 실태분석 및 근로유인을 위한 정책 제안 기초연구」,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2023, 정책보고서에 기반하여 작성.

2)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활용한 장애예술인 고용 및 기초수급 현황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취업자 수를 산출한 결과 1.6%(추정 수 9,644명)로 나타났다. 지난 주 일자리를 원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응답받은 결과, 65.7%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로 응답하였다. 이어 ‘장애 이외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12.9%),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해서’(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은 0.6%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지난 주 일할 의사는 있었지만 지난 4주간 구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구직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응답받은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의 26.2%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5.7%),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0.4%),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3) 2023년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수요·공급 조사 활용한 장애예술인 경제활동 현황

현재 수급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충분한 고용기간(최소 1년 이상)이 보장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면, 수급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인 64.0%가 수급권을 포기한다고 응답하였다. 수급권을 포기한다면 충분한

고용기간의 최소치로는 무기근로계약(68.8%), 충분한 월급여 수준은 150~200만원(37.5%)을 가장 희망하고 있어 높은 월급여보다는 안정적인 고용기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예술인의 근로 진입 및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기초생활 수급권 변동 시 유예기간 설정과 자활근로사업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상 근로동기를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예술인들에게도 동일한 과제가 존재한다. 장애예술인의 근로동기를 강화하면서 근로 진입 및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차적으로 필요한 보완장치는 (중증)장애인이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수급권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에,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미국의 'Ticket to Work'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수급자에서 갑작스런 변화를 주기 보다는 탈수급 준비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1년 이하 기간은 지속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많으므로 최소 2년 이상은 되어야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관련된 규정은 없으므로, 탈수급 유예 기간 설정은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맞춤형 급여 도입 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통합급여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탈수급 시 한시적으로 의료,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행급여(2011), 탈수급 조건부로 3년간 일정액을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2010) 등

의 제도를 도입·시행해 왔던 역사가 있다. 특히 이행급여 특례 제도는, 수급자가 취업·창업을 통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탈락이 원칙이나 생계급여만 정지하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탈락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여, 수급자의 자립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한 제도이다. 이를 대체한 것이 맞춤형 급여로, 새로운 제도 도입 목적 중 하나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계였던 최저생계비 단일기준에 의하여 모든 급여가 All or Nothing 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그동안 이행급여 특례 등으로 구현 하던 탈수급 유인 및 수급자의 자립 의지 고취를 맞춤형 급여 기본 제도 틀 안에서 구현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제도 개편의 결과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면서 신규수급자의 이행급여 특례 적용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둘째, 소득보장과 안정적 근로를 준비하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자활급여는 조건부 수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조건부과유예자 규정). 조건부과 유예자는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사람으로,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 대학생, 장애인 등이다. 장애인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직업재활실시기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은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 재활실시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조건부과 유예와 유사한 규정으로 조건제시 유예자는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

는 자이다. 조건제시 유예는 제한적이며 예외적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군·구 담당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2023년 현재 자활근로 인건비 수준은 일 8시간 주5일 기준인 시장진입형은 월 표준소득이 1,466,920원이며, 동일 조건인 사회서비스형은 1,271,140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1일 5시간, 주 5일 기준인 근로유지형은 702,250원 수준이다.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안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이 없다.

현재 자활근로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조건부과 유예 규정을 문화예술분야에서 교육훈련 중인 장애예술인까지 확대한다면(시행령 제8조제2항 개정), 생계급여 등 기본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이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 배양 및 자립 장애요인의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영역은 간병, 집수리 등 전국 표준화사업, 커뮤니티 케어(주택개보수, 돌봄), 정부양곡 배송 등 공공·민간 연계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역 특화형 시범사업으로 장애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자활사업단을 구성하여 자활사례관리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자활사업단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활사례관리는 개인별 자활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상담, 근로 기회 제공, 자활근로를 통한 근로 의욕·자존감 고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자활 방향 수립을 지원하며 자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조정, 점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 내·외 사회복지 유관 기관 등과 상시 업무 연계하고 있다.

2)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장애예술인 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현재 활용 중인 근로 동기 유지를 위한 소득공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한다. 즉,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이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최초 제정 당시(2000년)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 소득에는 선 20만원 추가 30% 공제, 직업재활시설 근로 시 선 20만원 추가 50%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근로동기 유지를 위해 장애예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기초보장 수급권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일반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선 20만원 추가 30% 공제 조항’을 상향하여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적용되는 ‘선 20만원 추가 50% 공제’를 적용한다면 탈수급 동기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제2항 소득평가액 범위 및 산정기준 조항 개정).

둘째, 현재 기초생활수급 보장이 중지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가 연계 지원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과 차상위 장애인 지원이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등의 서비스 등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되는 것이 예상되는 장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연계 서

비스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문원 혹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차상위 장애예술인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혹은 예술활동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확충하거나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기초생활수급권 특례제도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이와 관련하여 개인단위 급여의 범위가 변화되었고, 아울러 수급권자 범위의 다양한 특례가 점차 확대·적용 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특례 적용에는 다양한 특례제도가 있다. 장애예술인 특례 신설시 참고 가능한 사례로 농어업인 가구인 수급(권)자 특례를 살펴보면, 세계 무역기구(WTO) DDA협상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 인구의 증가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 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지출요인을 인정한 것이다.

특례 적용은 개별 급여에도 적용 가능하다. 현재 의료급여 특례 규정을 보면,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하여 특례지원하고 있다. 적용방법은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지출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에 대해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의료비를 산출하고, 그 평균 의료비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차감 적용하여 동 특례 적용대상자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1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대상이며, 2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 화상환자) 등록자를 제외한 경우에 해당한다.

장애문화예술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특례제도 활용방안으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지원, 문화예술교육훈련 지원금 등을 신설, 확대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장애문화예술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추가 지출요인으로 인정하여 추가 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개정이 필요하다.

4) 다양한 장애예술인 자립자금 마련

장애예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장애예술인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한다.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유인제도로 자립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현행 제도(예를 들어 키움통장 등)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중 현금 급여 중심의 자활사업프로그램으로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I 생계, 의료수급가구)이 2011년에 신설되었다. 자립자금제도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먼저, 월 5만원, 10만원 중 선택하여 본인이 저축을 하고, 둘째, 시군구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일정 산식 요건에 의해 지급 및 적립을 하고, 셋째, 중앙자활센터(현 자활복지개발원)가 민간 자금 등 매칭금을 1:1로 지원하면, 마지막으로 3년간 지원 및 적립 후 적금자가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2013년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2014년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청년), 2020년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하반기)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왔다.

2023년 현재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 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지원액은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소득 장려금은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총 소득 45%)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하는 것으로 월 최대 지원액은 523,000원이다.

이에 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이며, 2023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적용하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지원)한다.

자립자금 마련과 관련하여 장애예술인을 위한 키움통장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도입하여 활용 중인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한 장애예술인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유효한 정책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서울시 안심소득,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등 근로동기부여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지방자체단체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2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3년 기준 안심소득 최대급여액(소득‘0’원)은 1인 가구 883,110원, 2인 가구 1,468,870원, 3인 가구 1,884,800원, 4인 가구 2,295,410원이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3년에는 경기도 내 13세~64세의 「장애인 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2,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뤄낸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주 2회 총 1시간 이상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 원(6개월 간 총 30만 원)의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7월부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3.6.30. 기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2,493,470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제외대상자는 신진예술활동증명자, 19세 미만자(2004.7.1. 이후 출생자)와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등이며,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이나 탈락이 있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50만원이며 2회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안심소득,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제도 또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과 유사하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직업준비 자금으로 일정한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 및 교육·직업능력 훈련기회 확대

1) 장애예술인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들의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예술인들이 요청하는 지원 인프라로 미술 전시 공간 등 예술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예술활동을 배우는 과정 혹은 개인 혹은 집단차원에서 예술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공간 마련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인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활동 공간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한우리문화센터가 제공하는 미술분야 공동작업장과 유사한 작업 공간을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하게 되면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장애인복지관이 확보하고 있는 공간을 내부 규정으로 갤러리로 활용하게 되면, 미술분야 (예비)장애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등록에 필수적인 미술작품 전시 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기초지자체 책무영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장문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애예술인 작품 전시공간으로 지자체 청사, 지하철 역사(을지로 아뜨리에 갤러리 등)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 하나 상설 전시관 마련과 관련한 제안으로 온라인상 상설 전시관 마련과 온라인 예술작품 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전시,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위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예술인들 또한 복잡한 대관 절차와 비싼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는 등 작품발표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장애예술인 전시공간 마련과 동시에 예술품 전시활동이 장애인식개선 활동으로 보다 활발하게 연계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2년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을 받아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콘텐츠 공모사업인 ‘너나들이_Better Together’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을 통한 온라인 장애인식개선(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포함) 교육콘텐츠 기획과 개발로 장애예술인 일거리 창출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장애인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기반한 다양한 장애인식개선포럼도 주요한 목표의 하나였다. 발레리나 고아라(청각장애), 비보이 김완혁(지체장애), 피아노병창 최준(자폐성발달장애), 수묵크로키의 석창우 화백, 무용가 김용우(지체장애) 등 장르별 대표적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영상 콘텐츠를 구성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수강자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작한 것이다.

2)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술지원인 양성 및 배치

장애예술인의 활발한 예술활동 확대를 위해 예술지원인의 양성과 배치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예술지원인(Kunstassistent)이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지원인은 장애예술인이 필요한 재료나 도구 구입이나 준비 같은 단순 업무로부터 전시 준비, 작품 홍보 활동과 더불어 장애예술인의 전문적인 예술성을 발견하고 이를 최대화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술지원인의 양성과 배치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EUCREA, BehindART와 같은 장애예술인 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Freie Akademie für Kunst und Kreativität Ober-Ramstadt(이하 FAKKO) 및 일부 아뜰리에 등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실습과정을 거쳐 수료증(또는 자격증)을 부여해주고 있다. 예술지원인 양성교육과정 중 FAKKO의 미술분야 사례를 살펴보면, 5주 간 주말에 진행되는 교육과정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예를 들면 미술 재료 구매, 물감(페인트) 제조, 인쇄 작업, 전시회 준비 등), 색상과 소재, 공간, 빛과 그림자, 예술적 기술과 지식의 중재, 회화 및 드로잉 영역의 예술적 기법, 장애예술인의 자기결정 가능성 탐색, 장애예술인을 예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등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에는 예술지원인이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습 과정이 포함되는데, 실습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직접 만나서 이들을 실제로 지원해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¹⁾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과 관련하여 현재 기준 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근로자는 물론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인적지원제도로써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1) 우리나라의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이하 근로지원인 제도)는 2011년 3월 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하면서 제19조2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있다. 근로지원인 사업 목표만 보더라도 2019년 3,000명 수준이던 사업 목표는 2020년 5,000명, 2021년 8,000명으로 빠르게 확대되었고, 2022년과 2023년 경우 10,500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을 고려한 근로지원인의 양성이나 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처럼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술지원인의 양성과 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로지원인의 양성은 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과 교육위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술지원인의 양성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예술지원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예술지원인 양성교육과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예술지원인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교육위탁기관을 통해서 예술지원인을 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문화예술원이 직접 예술지원인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거나 교육위탁기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예술지원인 양성교육과정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조속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경우, 기존에 양성된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예술지원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특별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또는 관련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 과정을 수료한 근로지원인이 예술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특별교육과정 또는 보수교육의 신설은 장애인문화예술원과 장애인고용공단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예술인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및 스튜디오 확대

장애예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불편함 없이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장애예술인 가운데 일부는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로 인해 예술활동은 물론 이동이나 접근 또는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장애예술인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을 불편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된 스튜디오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고, 예술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원인력이 배치된 스튜디오가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확대를 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장기 및 단기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예술인을 위한 스튜디오의 조성 및 확대가 필요하다. 2022년 9월에 발표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전국 거점별로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전시공간 및 무장애 창작공간 조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예술인 맞춤형 레지던시 시설 조성 및 기존 레지던시 시설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본계획에 담겨진 장애예술인을 위한 문화기반 시설 조성 및 맞춤형 레지던시가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더하여 독일의 사례처럼 장애예술인을 위한 장기 및 단기 레지던시 프로그램 확대와 더불어 장애예술인의 활발한 예술활동을 위한 예술지원인의 배치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장애예술인정책과 연계

지방자치단체 장애예술인 정책과 연계하여 장애예술인 대상으로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과 기초지자체 차원의 관련 프로그램

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요대비 미흡한 수준이다.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취업지원특화사업으로 장애예술인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예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체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에 따른 고용 지원 홍보 및 장애 인식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 예술 분야로 직업적 욕구와 역량을 지닌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홍보, 사업체 및 직무개발, 장애예술인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적응지도 및 사업체 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장애예술인 인프라 구축사업은 예술(미술·음악·문학 등) 관련 직무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예술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법인((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및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연계된 장애예술인 발굴 및 인프라 구축과 예술 관련 직무로 취업을 희망하는 센터 등록 구직자 탐색 및 구직자 상담을 통한 장애예술인 발굴 및 인프라 구축 양측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장애 예술품 대여·판매 연계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기도형 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누림아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누림센터에서는 ‘누림ART&WORK’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장애 예술인의 그림을 대여·판매하면 해당 작가에게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누림아트 갤러리」는 전시 작품이 대여·판매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가 생기는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누림아트 갤러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19조(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활동 지원 등)를 근거로 개관하였으며 도내 장애예술인 및 기관(단체), 도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5)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연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장애인복지관이다. 조창빈 외(2020)는 장애인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분석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122개의 장애인복지관과 해당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한 846개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중 장애인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2개의 장애인복지관 중 45개(36.9%) 기관이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04개 (85.2%) 기관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97개(79.7%) 기관이 외부 강사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개수는 자체 운영 프로그램이 평균 1.66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프로그램이 평균 2.10개, 외부 강사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평균 6.23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운영한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미술(30.5%) 분야였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식은 체험형(56.0%)이 가장 많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으로는 6개월 이상(81.4%)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대상 장애유형은 장애유형 통합(50.1%)이 가장 많았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평균 수강료는 1.25만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재정지원 형태는 기관 자체예산 운영

(35.0%)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조창빈 외, 2020).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문화예술특화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은 예술인지원 및 기획사업으로 시각예술분야와 공연예술분야 지원하고 있다. 시각예술분야는 시각예술인지원사업으로 작품활동 지원, 외부자원개발, 멘토링클래스 프로그램을, 시각예술기획사업으로 기획전시, 해외교류전, 액티브아트컴퍼니, 아티스트 역량 강화, 작품 공모전을 지원하고 있다. 공연예술분야는 공연예술인지원사업으로 공연예술가 발굴·육성클래스, 공연예술가 활동지원을, 공연예술기획사업으로 기획공연(관내, 관외), 퍼포밍아트스테이지(공연예술경연대회), 국제교류지원(골든콘서트), 액티브음악회(연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는 특화사업으로 서초한우리 오케스트라사업과 서초한우리 미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서초한우리 미술창작소는 1년 단위로 3명의 장애 미술작가에게 공동작업실을 제공하며 창작 활동 지원 외에 전시 발표와 공모사업 연계, 아트 상품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전업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6) 장애예술인 교육훈련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들의 교육훈련기회 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예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문화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장애예술인들의 교육훈련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문화 바우처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이 추진되었다. 2023년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이다. 바우처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으로 1인당 35만원 지원하고 있다. 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현재 장애예술인들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GI조사 결과). 바우처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장애예술인들의 교육훈련을 위한 바우처 활용방안 외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직접 교육훈련비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금전적 취업지원제도 중 기능습득비가 있다. 기능습득비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능습득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업료 등과 자격검정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문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에게 소정의 문화예술학습비용과 자격증 유지비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기회 확대 방안으로 장애예술인 활동 인프라가 갖추어진 전문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원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2022년 10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이사장 김성환, 이하 ‘뷰티플마인드’)는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뷰티플마인드는 2007년 3월 설립되었으며, 2008년부터 시작된 ‘뮤직아카데미’를 통해 장애 및 비장애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뮤직아카데미 재학생과 수료생들로 이루어진 ‘뷰티플마인드 오케스트라’는 2010년 3월 시작되어 총 40여명의 구성원이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장애인 예술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뷰티플마인드 취업 연계프로그램

‘뷰앙상블’은 2021년 시작되어 현재 총 7개 기업체에 19명의 연주자가 고용되어 각 기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뷰티플마인드에서 육성한 장애 음악인의 일반 사업체 취업 지원과 취업 후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취업 연계, 직무지도원 또는 근로지원인 배치, 근태관리 프로그램 등 각종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장문원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 전문단체들을 발굴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예술인 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예술인 전문단체와의 협업은 궁극적으로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생활보호수급자의 취업지원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민간에게 종합 취업서포트사업을 위탁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문원 주관으로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장애예술인 교육은 물론이고 취업지원사업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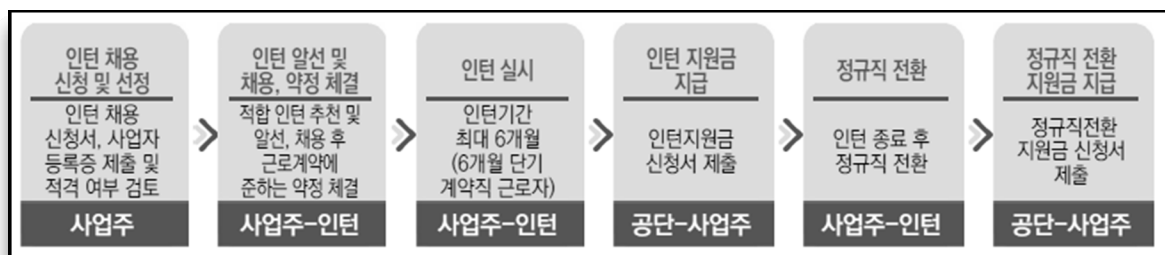
넷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방법으로 장애인복지관 등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현장 훈련과 고용 연계 제고를 위한 인턴십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수행기관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한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장애인 음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하트하트재단(하트하트 오케스트라), 광명시의 적극적 지원과 민간자원과 협업에 기반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 한국전기안전공사(유니버설 안전예술단) 등을 활용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인턴제를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

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 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총 9개 장애유형)과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 등이 인턴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체(고용보험가입 사업장)를 대상으로 인턴 기간(최대 6개월) 동안 월 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최대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인턴 참여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유지 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를 추가로 지원한다(최대한도 80만원). 유흥 및 향락업, 용역업, 계절성 직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2022년 경우 장애인인턴제를 위해 투입한 예산 규모는 32억원 수준이며, 장애인인턴제 참여자는 925명으로 이 중 609명이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b). 장애인인턴제의 사업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장애인인턴제 사업추진 체계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민간 인턴과정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시니어인턴십 제도는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인턴지원금으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하며(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하는 제도이다.

7) 장애예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

장애예술인 민간영역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는 장애예술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훈련과정 개발은 장애유형(발달, 시각, 청각 등) 및 예술 분야별 민간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 맞춤형 훈련과정 과제의 구체화를 위해 먼저 장애인문화예술원과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위해 특화된 직업능력개발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형훈련센터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에 문화예술분야 교육훈련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기숙형 장애인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양성훈련을 통해 장애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개²⁾가 운영중인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융·복합훈련(기초부터 복합기능 기술자 양성을 위한 수준별 전문 훈련), 특화훈련(장애 특성 및 개인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및 다양한 훈련지원 프로그램(건강관리, 심리·인지재활, 신체능력 등 개인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2)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건립중인 공단의 6번째 직업능력개발원인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은 2024년 개소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원 주요 훈련직종을 살펴보면, 직업능력개발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융합기계, 3D 기계설계, 스마트가공기술, 스마트전력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IT사무기술, 융합소프트웨어, 경영사무지원, IT자격증, 디지털리터러시, 비주얼영상디자인, 스마트출판인쇄, 주얼리, 네일아트, 외식응용제빵제과 등을 중심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5개 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현재 비주얼영상디자인훈련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분야 훈련과정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5개 직업능력개발원은 물론 2024년 개소되는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 문화예술분야 교육훈련과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공단의 맞춤형훈련센터(6개소)에서는 교과과정 설계부터 훈련생 및 맞춤형훈련을 통해 채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이 원하는 직무에 맞추어 유연하게 훈련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훈련센터의 경우 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을 구축하여 모의훈련을 통해 장애인훈련생의 현장적응력을 강화하고, 기업체 현업 과제를 활용한 프로젝트식 훈련으로 실무적응력을 높이며, 현업 실무자가 직접 훈련에 참가하여 생생한 현장 기술을 전달하고 있다.

맞춤형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맞춤형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인데, 훈련생 선발부터 교과과정 설계, 훈련까지 훈련을 의뢰한 기업체의 요구에 맞춰 이루어진다. 기업 실무자나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해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수료생은 취업과 동시에 현장에 배치되어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교육에 대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훈련생 입장에서는 모의훈련을 통해 직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향후 공단의 맞춤형훈련센터에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분야의 훈련 확대가 필요하다. 공단의 맞춤형훈련센터 가운데 서울맞춤형훈련센터의 경우 문화에

술분야 직업훈련 개설을 통해 훈련 수료 후 채용까지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문화예술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신직무 창출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장애예술인의 기업 채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맞춤훈련센터는 2021년 웹툰 분야 인력 양성을 시작으로 이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단원 등 장애예술인 1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서울맞춤훈련센터의 성공 사례처럼 향후 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는 공단의 맞춤훈련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관련 기업이나 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확대하여 문화예술분야 맞춤형 훈련서비스를 제공하여 훈련 종료 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단의 19개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직업체험을 통하여 직업적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따라 설계된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제조기술, 스마트 사무행정, 서비스산업 등을 중심으로 특화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미 영역에 머무르던 장애인의 특기를 고용 영역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문화예술분야 교육 및 훈련과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훈련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사업비 지원을 통해 민간훈련기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과 공공훈련기관(한국폴리텍대학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훈련 접근성을 강화하고

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이 생활 근거지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이나 훈련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훈련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비장애인과 통합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 해왔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훈련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훈련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 해왔다.

그러나 공단의 민간 및 공공훈련기관 지원사업의 훈련 직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는 거의 전무한 실정³⁾이라 향후 문화예술분야의 훈련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민간훈련기관에서 문화예술분야의 훈련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민간훈련기관을 지원대상 훈련기관으로 더 많이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공단에서 이전에 실시했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개별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⁴⁾을 벤치마킹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 근거지에서 문화예술분야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수강료와 훈련교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 2020~2022년 기간 동안 민간훈련기관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전체 훈련분야 가운데 문화예술분야에 속하는 공예, 문화콘텐츠제작 및 디자인 직종의 훈련생 비율은 2020년 3.6%, 2021년 9.6%, 2022년 11.8%로 나타나, 문화예술분야 훈련생 비율이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예술분야 훈련직종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훈련생 비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

4) 개별적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구직장애인이 생활 근거지에서 취업을 위해 자신이 희망하는 다양한 훈련과정(국가 자격 및 면허 취득과정,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훈련수강료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었다.

4. 중기 정책과제 및 장문원 역할강화

1) 장애예술인 위한 사회보험제도 개편 및 장애인 위한 공공부조제도 개편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예술인의 근로 진입 및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장애예술인을 위한 고용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개편과 장애인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물론 서구사회에서도 많은 예술인의 경우 소득 활동 기간이 일반 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실업수당이나 공적연금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며, 업무상 질병이나 산업재해를 일반 제도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예술인들을 일반 사회보장제도로 편입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관련 제도를 조금씩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장애예술인 더 나아가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독일의 선형적 사례가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독일에서는 「예술인사회보험법」 제정과 운영을 통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선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예술인들과 언론출판인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임금근로자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나머지 50% 가운데 20%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예술인사회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예술 및 미디어 종사자를 사용하는 이들(갤러리, 박물관, 오케스트라, 합창단, 음악학교, 극장, 방송국, 광고 에이전시, 기획사, 출판사,

언론사, 예술인 훈련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저작권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것은 상업적 기업들이 예술인들의 창작품을 통해 기업적 이익을 누리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장애)예술인이 예술인사회금고에만 가입을 해도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독일은 예술인사회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인 예술인사회금고를 1983년에 설립하였는데, 예술인사회금고는 피보험자의 보험료, 예술인사회부담금, 연방정부보조금을 관리하고 독립의(자영) 예술인 및 언론출판인의 보험가입 의무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예술인들의 사회보험 더 나아가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독일의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 사례(「예술인사회보험법」 제정 및 운영, 예술인사회금고의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예술인의 공공부조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과제로서 독일의 사회부조(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해당) 체계에서 운영 중인 ‘노인·근로능력감소자 기초보장제도’(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이하 GAE)를 벤치마킹하여 제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1차 안전망인 공적 사회보험을 통해 기초보장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조세를 바탕으로 하는 2차 안전망인 GAE를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2) 장애예술인 지원 관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역할 강화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사업수행 기관으로서 장애인문화예술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예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차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 교육훈련 체계 마련과 교육훈련 기회 확대가 필수적이다. 장애유형(발달, 시각, 청각 등) 및 예술분야별 민간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운영 의제는 1차 발전계획안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제는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 차원의 장애인 일자리 관련 지원인력 제도, 예를 들어 근로지원인, 활동지원사 등을 문화예술분야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로 정리되어 있다. 인턴제도 도입 등 관련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장문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장문원은 이러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문화예술분야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및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예술인 인턴제도 신설, 직업재활시설 활용, 전시 공간 등 지원인프라 확충, 지자체는 물론이고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방안 마련 등 장애문화예술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둘째, 장문원의 중요한 역할로 202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예술인 일 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중개 업무 위탁기관인 장문원의 누리집(www.i-eum.or.kr)을 통해 우선구매 제도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대한 정보, 우선구매 기관의 구매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 본 자료집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수급권 실태분석 및 근로유인을 위한 정책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부장)

1. 정확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양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기초수급을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상태 및 수급 탈피 의향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특히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수급권 과 근로 관계 등의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기초 수급 장애인의 수급 포기(혹은 탈피)와 관련하여 ① 수급 급여보다 높은 급여 ② 충분한 고용기간이 보장된 일자리 취업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이와 함께 의료비 문제, 탈수급 이후 수급 신청 어려움, 수급 장애인의 근로 의욕, 수급 탈피를 위한 지원 체계 등과 같은 이슈 역시 중요함.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위한 실태나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장애예술인의 근로 진입 및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권 변동에 따른 많은 요인들로 인해 실제 진입으로 유인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임. 그런 점에서 유예기간 설정, 자활근로사업 활용, 근로소득공제 확대, 특례제도 활용 등과 같은 제언들은 상당히 중요한 개선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들 개선 과제들은 이전에도 제기되었지만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장에서는 분명 수급권 변동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자활근로 사업에 수급 장애인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자활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으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다만, 지속적으로 자활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임. 예를 들어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 대상자의 인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자활을 통한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핵심 목표인가에 대한 점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함
- 근로소득 공제 확대의 경우 일반소득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해 추가공제의 비율이 다름. 발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여기에 덧붙여 장애 예술인에게 특화된 소득 즉, 지원금이나 준비금 등과 같이 예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도 공제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 장애예술인 자립 자금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예술인 자산형성지원, 장애 예술인 직업준비 자금 등과 같은 자립 수당 지급 제도 신설 방안은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됨. 다만, 장애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신설 과정에서 장애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되어 할 것이며,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임

3.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인프라 및 훈련 기회 확대

-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이나 예술품 전시를 인식개선 활동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나 ‘예술지원인’양성 및 배치 등과 같은 논의는 중요한 제언이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장애예술인의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장애예술인의 범주를 구분할 경우 예술분야 입문(장애인예술활동가) → 예비 예술인 → 예술분야 근로자→ 예술 창작자 → 전문 예술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다시 근로자성과 소속에 따라 달리 구분될 수 있음¹⁾.
- 고용지원이나 훈련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근거와 부합하는지 여부 및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예술지원인 양성도 같은 의미에서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 영역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1) 심진예, 박종빈, 김용탁, 장숙현(2020)의 논의를 수정하였음

3. 예술 영역과 근로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에 대한 접점

- 수급자의 근로 유인이라는 이슈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이슈는 예술 영역과 근로를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화 예술 영역이 아닌 타 영역에 있는 장애인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음
-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자성’ 개념에 근거한다면, 장애예술인 중에서 근로자 혹은 예비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함. 이러한 측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장애 예술인이 타 영역의 장애인과 구분되면서 차별화된 지원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가 더 이상 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를 수급 탈피, 수급 중단, 수급 포기, 수급자격 박탈 중 어떻게 명명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개념 정립 역시 필요함. 장애인이 ‘일할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가 수급 자격 박탈이라는 답변이 0.8%, 1.9%라고 한다면, 수급자 특히, 장애 예술인 수급자에게 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임.

<참고>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수급 탈피 관련 문제점과 해소 방안²⁾

시기	문제점	해소 방안
장애 등록 장애 발생	① 근로 무능력 ② 근로의욕 감소 ③ 근로의사 없음	① 근로능력 평가를 통한 가능한 서비스 종류 분류 - 취업·신체·심리재활 등 ② 관련 서비스 제공 및 기관 연계
↓		
실업	① 취업 서비스 제공 못 받음 ② 장애로 인한 근로 불가능 또는 근로의욕의 감소	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보 및 서비스 제공 ② 훈련 서비스 제공 ③ 실업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사회적 기능 유지
↓		
수급 신청	① 수급 관련 서비스 정보 미흡 ② 수급 탈피 방안 제시 미흡	① 수급 관련 교육 프로그램 - 수급 내용, 의무, 탈피, 등에 대한 종합 지원 ② 수급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컨설팅 실시
↓		
수급 유지	① 수급 탈피 방안 제시 미흡 ② 수급자 의료비 가중 불안 ③ 수급자 수급 탈피 의욕감소 ④ 근로 시 수급 급여 삭감	① 수급 관할 기관 - 고용서비스 연계 ② 의료비 지원 방안 ③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④ 수급 탈피 두려움 등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의 개입
↓		
수급 탈피	① 각종 정보 제공 미흡 ② 일할 기회가 없거나 일하게되면 급여 축소	① 취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 ②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일자리 활성화 - 급여와 별개 ③ 일하는 기간 동안의 적금 제도 ④ 목돈 만들기
↓		
고용유지	① 근로 시 수급 단절 두려움 ② 일자리에서의 건강 문제 ③ 고용 안정의 어려움 ④ 취업 중 장애·건강 악화	① 수급 유예기간 연장 ② 의료비 및 주거비 지원 ③ 장애인 근로자 건강 보호

<참고문헌>

- 김용탁, 전주용, 이민영(2017).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확대를 위한 복지-고용서비스 개선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심진예, 박종빈, 김용탁, 장숙현(2020).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 김용탁, 전주용, 이민영(2017) 논의를 정리함

지정토론

장애예술인 수급권 실태 분석 및 근로유인을 위한 정책

장진아 (하트하트A&C 대표)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 정비 및 개선이 논의 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됨.

때에 맞춰 2023년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 이인재 교수님과 함께 [장애예술인 수급권 실태분석 및 근로유인을 위한 정책 제안 기초연구]를 실시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어서 감사함

현황 분석 자료인 “2023년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수요 공급조사”에서 현재 급여 수준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충분한 고용 기간 (최소 1년 이상)이 보장된 다면 수급권을 포기한다고 응답한 예술인이 64,0%로 높게 나타남. 이는 장애인 예술 활동의 양적인 확대에 비해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됨.

근로유인을 위한 정책 제안은 크게 2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장애예술인이 근로시장에 진입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장애예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직업능력 훈련 기회 확대 방안으로 연구결과에 공감하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더하고자 함.

□ 근로진입 및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실제 현장에서 수급권자인 장애예술인이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음. 단순히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문제가 아닌 의료, 교육급여의 중단에 따른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맞춤형 급여로 일부 해결은 되었으나 이 또한 일시적이고, 적은 급여를 받고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창의인재동반사업”은 월 150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1대2대의 전문 멘토링을 받고 고용시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연계가 가능한 장애예술인에게 특화된 사업임. 실제 2023년 발달장애 동화작가가 본 사업을 통해 동화작가로 데뷔하고 정식 출판계약을 맺음. 하지만 본 사업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수당 성격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년 단기 지원을 받아 작가로 데뷔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고용 환경에 남는 경우가 많음.

이에 연구에서 제안한 자활근로사업, 근로소득공제 확대, 기초생활수급권 특례제도, 희망키움 통장과 같은 장애예술인을 위한 자립자금 마련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초기에 고용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문화예술이라는 특화된 분야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무기계약 예외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함. 대한 장애인 체육회에 소속된 장애체육인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 및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기계약 예외 규정 적용받고 있음. 이는 스포츠의 특성상 장시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룹 스포츠의 경우 멤버의 잦은 교체로

팀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 예외가 스포츠인의 고용유지에 효율적이라 생각됨. 기간제법 예외규정에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처럼 문화예술 또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도 가능하다고 생각됨. 무기 계약 예외가 정규직 고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으나 초기 근로 시장 진입에는 긍정적이라는 생각하며, 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무기계약 예외로 예술활동 및 고용의 안정성 확보를 기대함.

□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직업능력 훈련기회 확대방안

장애예술인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동의함.

문화바우처의 경우 지원금액이 적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경우 사용 가능한 기관이 제한되어 있어 사용에 어려움이 많음. 문화누리 사업 중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은 월 11만원을 1년간 지원받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 예술 강좌이용권”의 신설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짐.

장애예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업 또는 인턴십 사업은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겨짐. 2022년 장애인고용공단의 인턴십 참여 장애인 중 65%가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로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이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됨.

마지막으로 장애예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이는 단순한 예술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활동 결과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됨. 아직 현장은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7인의 양상블을 초청하고 1인 강사비를 문제 의식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장애인 예술

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장애예술인의 근로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등 범부처적인 협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됨. 이는 각 부처의 역할이 있음과 동시에 어느 부처의 역할인지 모호한 부분이 될수 있으므로 본 정책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 중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부처간 협력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장애예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헌예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